

진보적 문예운동의 형성과 전개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을 중심으로

이명원

지행네트워크 연구위원

〈논문요약〉

이 논문은 민족예술인총연합의 형성과 전개과정에 대한 검토를 통해 진보적 문예운동의 역사와 현재적 의미를 검토하기 위해 쓰여졌다. 민예총은 1980년대 이후 문예운동의 조직화 과정에서 등장한 명실공히 진보적 문예운동 연합체였다. 민예총의 형성은 민주화의 요구를 압살하면서 등장한 신군부의 정치적 반동에 대한 문화적 저항의 표출이었다. 특히 1987년 6월 항쟁 이후 민주화운동이 조직화되는 와중에, 문화운동 역시 조직화의 경로를 걷게 된다.

그러나 1987년의 민주화 과정 속에서 형성된 민예총은 형식적 민주화 국면인 1990년대를 경과하면서, 문예운동의 이념에 일정한 변화가 야기된다. 민예총의 사단법인화는 그간의 저항적 문예운동 단체가 문화운동의 명백한 주류 세력으로 스스로를 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동시에 민예총의 위기이기도 했다. 특히 민주정부인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경과 하면서, 민예총은 조직의 규모 면에서는 양적 확장을 거듭했지만 문예운동의 정체성 강화 및 이론의 성숙 면에서는 정체상태에 처하게 되었고, 이것이 2000년대를 경과하면서 운동의 위기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 논문은 이러한 문예운동의 변화양상을 현실과 감정구조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조명하고 있다.

■ 주요어: 감정구조, 문예운동, 문화운동, 민주화, 거버넌스

1. 서론

1988년 11월 23일 서울 YWCA 강당에서 진보적 문예운동 연합체인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이하 민예총)’이 역사적인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고은(시인), 조성국(무형문화재), 김윤수(미술평론가)가 초대 공동 의장으로 선출되었고, 1970~1980년대 내내 반독재 민주화운동을 벌였던 문예단체들이 하나의 조직 아래 결집했다.

창립 당시 민예총의 회원은 839명에 불과했으나, 창립 10주년인 1998년에 이르러서는 전체 회원수가 1만여 명에 육박했다. 가입 단체는 문학, 미술, 민족극, 사진 등을 포함하여 9개의 장르위원회로 확대되고, 지회조직 역시 20여 개로 확대되는 등 명실상부한 진보적 문예운동 연합체로 자리 잡게 된다.

그러나 20여 년의 세월이 흐른 2010년 현재의 입장에서 보면, 민예총 결성시의 진보적 문예운동에 대한 열망이 양적인 성장에 조응해 질적인 성숙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반대로 오늘의 민예총은 문예운동의 장·단기적 비전의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직의 유지조차 ‘민예총 재건’을 운위할 정도로 악화되어 있는 실정이다. 1980년대의 ‘반독재 민주화’라는 대항적 운동 국면에서 생성된 집합적 열정은, 형식적 민주화 이후 문예운동의 제도화·주류화·관성화 경향 속에서 역설적으로 약화·쇠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논문은 한국에서의 진보적 문예운동의 형성과 전개라는 관점에서 민예총의 형성·발전·쇠퇴의 추이를 당대 한국 사회의 역사적 성격변화와 문예운동 내부의 문화적 전망설정의 관계와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해석해 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쓰여진다. 민예총의 형성과 전개과정에 대한 연대기적 기술은 『민예총 10년사』에서 개괄적으로 서술된 바 있으므로 이 논문에서는 사실에 대한 실증적 기술보다는 민예총의 형성·전개과정을 둘러싸고 있는 시대의 감정구조(structure of feelings, 레이먼드 윌리엄스 2007, 94)의

변화양상에 해석학적 논의에 집중하고자 한다.

영국의 문화비평가 레이먼드 윌리엄스(Raymond Williams)에 따르면, 한 시대의 문화를 규정하고 사회조직 내의 모든 요소들이 특수하게 살아 있는 감정구조가 존재한다. 특정한 세대 또는 시대는 그들의 삶 전체를 특정한 방식으로 다르게 느끼며, 그들의 창조적인 반응을 새로운 감정구조로 형성시키하고자 한다. 때문에 각 시대 혹은 세대에게 인식되는 정치·경제·문화 영역에서의 민주주의의 성격 및 운동 목표는 상이하다(레이먼드 윌리엄스 2007).

이것은 운동조직의 차원에서도 유사하다. 운동조직이 하나의 유기체적 성격을 갖고 있다면 조직의 형성·전개·쇠퇴이라는 생애주기의 리듬으로부터 자유롭기 어렵다. 그러나 생명유기체와 달리 운동조직은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구조와 행위자 간 상호작용의 역동적인 변화에 따른 집합적 열망과 비전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 '생성'과 '쇠퇴'의 생애사적 리듬을 재구성할 수 있다.

때문에 민예총이 개입했던 문예운동의 형성과 전개과정을 치밀하게 검토하기 위해서는 사회현실의 구조와 이에 대항하거나 적응함으로써 운동의 방향을 조정해 온 행위자들의 감정 구조 쌍방이 유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큰 틀에서는 1987년 6월항쟁 이후의 민주화의 전개과정과 1997년 IMF 위기 이후의 한국화된 신자유주의로의 급진적인 체제변형의 문제가 유력한 참조점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동시에 문예운동과 문화운동으로 분리되는 운동의 주체에 대한 상이한 인식과 이것이 초래하는 운동의 목표와 조직화, 그리고 실천 사이의 분화에 대한 인식 역시 고려될 필요가 있겠다.

간명히 말하면, 민예총을 중심으로 한 문예운동은 전문예술가/이론가 중심의 운동이었으며, 이러한 생산자 중심의 엘리트적 운동방식이 선포된 것은 1980년대 문예운동의 특수한 성격을 보여준다. 그러나 1990년대로 넘어오면서 문예운동과는 다른 층위에서의 대중의 문화적 실천행위를 중시하는 문화운동에 대한 관심이 부각되고, 이것이 이후 '문화개혁시민연대

(약칭 문화연대)의 성립과 시민적 문화운동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이는 ‘예술가-작품-현실’이라는 문예운동이 ‘대중-텍스트-문화적 실천행위’라는 문화운동의 관점에 의해 약화되거나 그 주류성이 이월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민예총을 중심으로 한 문예운동의 생성과 전개과정은 운동의 구조적 규정력으로서의 정치 현실, 해당시기의 경제적 구조, 문화적 환경 모두와 밀접하게 연결된다는 점에서, 크게는 한국사회의 정치경제학적 구조 변동과 문화적 환경의 변화 모두와 내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현시점에서 과연 민예총은 무엇이었는가에 대해 묻는 일은 지난 20여 년간의 한국사회의 성격을 문제 삼는 일의 일부라 할 수 있다.

2. ‘광주항쟁’ 이후 문예운동의 조직화

1980년대 문예운동의 조직화를 가능케 한 것은 역설적으로 12·12쿠데타를 일으켜 ‘서울의 봄’을 제압하고 광주항쟁을 무력화시키면서 권력을 장악한 신군부에 대한 전 민중적 분노와 저항에 기인한다. 신군부는 등장과 함께 계엄령을 선포하고 파시즘적 통치를 노골화했다. 전국계엄령의 선포와 광주에서의 민중학살,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의 조작, 언론통폐합 및 노동계 정화 조치 등 전방위적 폭압정치로 민주주의에 대한 민중적 열망을 압살했다.

문화계 역시 심각한 탄압에 노출되었다. 신군부는 광주항쟁을 폭력진압한 직후인 7월 계간지인 『창작과 비평』과 『문학과 지성』을 포함하여 총 172개의 정기간행물을 등록 취소했다.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을 조작하여 고은 등의 문인을 구속했다. 이것은 쿠데타 세력에 비판적인 공론장의 형성 자체를 봉쇄함으로써, 공포 정치를 지속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

러낸 것이다.

그러나 신군부가 자행한 문학인에 대한 탄압은 거꾸로 광주항쟁의 진상규명과 민주화를 촉구하는 문인들의 실천과 조직화에 대한 열망을 촉진했다. 정치적 반동에 대한 문화적 저항이 시작된 것이다. 양대 계간지의 폐간 이후 문인들은 ‘자유실천문인협의회(이하 자실)’ 기관지인 무크(mook)지 『실천문학』을 창간한다. 무크지란 잡지(magazine)와 책(book)의 조합어이다. 무크지의 발행은 정기간행물에 대한 집권 세력의 검열과 허가 제도를 피하면서, 유격적인 문학운동을 감행하자는 당시 문인들의 열망이 창안한 새로운 출판방식이었다(김남일 2007, 16).

광주항쟁은 한국의 문인들에게 ‘죄의식’의 원천인 동시에 문학의 급진적 재구성을 요구하는 엄중한 사건으로 다가왔다. 광주항쟁을 목격하면서, 이전까지 한국문학의 주류였던 순수문학이나 자유주의적 문학운동은 민중주의로 급선회했으며, 명망가 중심의 엘리트적 운동방식은 새롭게 등장한 청년문인들과 민중들의 집단화된 운동적 실천으로 대체되기 시작했다. 문단의 유력한 제도적 표현기관은 사라졌지만, 이러한 공백상황에서 오히려 청년문인들은 무크지와 동인지 운동을 벌어나갔고, 기왕의 문학을 둘러싼 제도와 관념과 실천 모두를 변화시켰다. 청년세대 문인들은 운동성과 민중성을 그들의 문학 안에 녹여내기를 바랐으며, 지식인주의를 넘어서 노동자와 대중들 자신이 문학의 주체가 되기를 희망했다.

문예운동의 조직화에 대한 열망도 높아져서 1984년에는 시인 채광석 등이 중심이 되어 ‘자실’의 재창립이 이루어졌다. ‘자실’의 재창립 이후 문인들은 민족문학론의 이념 아래 문예운동과 사회운동을 결합해나갔다. 민중문학론에 대한 논의 역시 활발하게 전개되었는데, 이 문학론에서 제기된 쟁점들은 미술운동, 마당극운동, 노래운동 등에도 적지 않은 이론적 기초와 논쟁의 근거를 제공해 주었다.

문학운동과 함께 미술운동 역시 광주항쟁 이후 매우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서구미학에 종속된 미술관에 대한 반성은 1980년에 이르러 〈현실과

발언)(1979년 결성), 〈임술년〉(1982년 결성), 〈젊은 의식〉(1982년 결성) 등의 동인 결성과 함께 기존의 아카데미즘에 대한 비판과 민중미학으로의 전환을 이루어냈다. 문학에서의 민중 자신이 주체가 되는 문학 개념의 도입과 마찬가지로 미술계에서도 ‘시민미술학교’ 등을 통해 전문미술인과 일반 대중이 미술운동의 주체로 나서기 시작했으며, 미술동인 ‘두렁’ 등의 공동 판화 제작과 노동미술 개념의 창안은 예술과 운동의 유기적 결합을 가능케 했다.

진보적 미술운동에 참여했던 미술인들은 1985년 11월 ‘민족미술협회의 회(이하 민미협)’를 출범시켰다. 민미협의 창립 전후 미술인들의 현실개입은 민중운동과 노동운동 현장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방식과 함께, 그간의 아카데미 미술에서는 경시되었던 판화와 벽화, 시위 현장에서의 걸개그림과 만화 등 새로운 표현과 장르혁신을 이끌어냈다(라원식 2007, 67).

전통연희양식을 민중적으로 혁신화하고자 하는 집단적 노력도 1970년대에 이어 1980년대에도 매우 활발하게 벌어졌다. 민중연희전통의 비판적 재구성의 기획 아래 ‘마당극’ 개념을 이론화하고, 이것을 굿과 판소리, 민요, 탈춤 등에 적용시켜 민중적으로 혁신하고자 하는 운동이 대학가와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되었다(임진택 1990). 매체의 속성상 대중화와 상업화를 피할 수 없는 영화 장르에 있어서도 ‘서울영상집단’을 포함한 청년영화인들을 중심으로 한국영화의 리얼리즘을 확산시켜야 한다는 주장과 민중운동과 다큐멘터리 양식을 결합한 영화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서울영화집단 편 1983).

문예운동의 매개적 기반을 이루는 출판과 언론·교육운동 역시 광주항쟁 이후 의식화·조직화되는 국면으로 나아갔다. 신군부는 언론통폐합과 정기간행물의 폐간, 출판사의 영업취소를 포함한 광범위한 지식문화언론 탄압을 자행했다. 그러나 1980년대는 오히려 사회과학 출판의 시대였으며, 해직기자·해직교수·해직문인들이 출판운동에 가담하여 1985년 6월에는 사회과학 출판사의 조직체인 한국출판문화운동협의회를 창립했다. 1980년

대의 출판운동은 민족운동진영에 다가한 진보적 이론을 소개하고, 출판과 언론자유를 위한 투쟁을 조직화했으며, 지역운동과 부문운동가들과의 연계를 통한 운동자금의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유대기 2007).

문예운동 내부에서의 문예운동의 조직화의 흐름과 함께, 이 시기에 는 전체 민족민중운동의 부문운동으로서의 ‘문화운동’의 양상도 나타난다. 1984년 4월 14일에 결성된 ‘민중문화운동협의회(이하 민문협)’는 1970년 대 중반 이후 대학가를 중심으로 펼쳐진 탈춤·마당극 운동과 노래, 미술운동, 영화운동 등 대학 문화운동 출신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조직된 것이다. 창립 당시 민문협은 고문에 백기완, 실행위원에는 분야별로 송기숙·채광석(문학), 황석영(마당극), 원동석(미술), 김종철(언론), 허병섭·호인수·여익구·최민화(종교), 김학민(출판)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러한 조직구성에서 알 수 있듯 민문협은 장르예술 중심의 ‘문예운동’을 추구했다기보다는 포괄적인 민중운동의 일환으로서의 문화운동을 지향했다(김영철 2007, 133).

1970년대부터 문예운동은 일종의 민주화운동의 상징적·전위적 역할을 해왔지만, 1980년대에 들어서 그 성격은 변화한다. 1970년대의 문예운동이란, 많은 경우 명망가 엘리트 중심의 문예운동이었고 필화사건을 포함한 ‘작품’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투쟁이 대부분이었다. 물론 당시에도 예술인들은 정치적 국면에서 지식인 선언이나 문학인 선언을 통해서 유신정권에 저항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광범위한 민중적 연계를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문예단체들 간의 집단적 연대도 부재했다.

그러나 광주항쟁의 비극을 겪으면서, 새롭게 등장한 소장 예술인들은 정치운동(민주화운동)과 예술운동을 밀도 높게 결합시키기를 꿈꿨다. 물론 이것은 문예운동 내부의 질적 성숙으로만 가능해진 것은 아니었다. 1980년대 중반을 거치면서 광주항쟁 직후 신군부의 압제에 숨죽이던 운동세력들은 각 운동 부문별로 조직을 강화해나가는 한편,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1985년 결성)과 같은 강력한 통합운동단체를 조직한다. 총학생회의 부활

과 사회과학으로 무장된 학생운동의 성숙과 노동운동의 성장, 노학연대를 통한 두 부문 운동의 결합, 민중운동과 통일운동의 부상은 예술가들에게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이 시기에 등장한 소장 예술가들은 그들의 예술과 실천이 민중성을 기반으로 할 것과 종래에는 민중들 그 자신이 예술적 실천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희망했다. 그들은 민중의 편에서 문학과 예술을 하고자 했고, 종래에는 그들 자신이 지식인으로서의 한계를 뛰어넘어 민중으로 전화될 수 있다는 희망을 피력했다.

이들은 지식인 엘리트 중심의 문학제도를 극복하고, 현실의 운동적 정세를 반영할 수 없는 종래의 낡은 장르적 양식을 해체하고자 애썼다. 문학과 예술이 오직 '선전성'에만 함몰될 수는 없겠지만, 운동에 실천적으로 복무할 수 있는 문예운동의 조직과 미학적 원리를 찾고자 애썼다. 민주·민중·통일로 요약되는 전체 사회운동의 목표는 그대로 문예운동의 목표가 되었으며, 문예운동을 통한 민주주의의 건설, 민중해방의 이념 제시, 분단체제의 모순을 지양하기 위한 통일운동으로의 합류는 매우 자연스러운 경로였다.

그러나 이 시기의 문예운동이 균질적인 시각과 운동의 방식을 보인 것은 아니었다. 여전히 문예운동 진영 안에서도 '운동성'을 중심에 두느냐, '예술성'을 중심에 두느냐는 관점의 차이에 따른 논란이 있었다. 운동의 목표를 장르예술 안에서의 현실주의 미학의 체계화에 둘 것이냐, 아니면 현실변혁이라는 목표에 문예운동을 종속시킬 것이냐의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이 시기 내내 진행되었다.

3. 6월항쟁 이후 문예운동의 변화

1980년대 전반기 문예운동의 규정력이 광주항쟁에 대한 기억투쟁에 있었다면, 이후의 문예운동은 6월항쟁의 결과 조성된 현실에 대한 변혁적 열망의 상승에 기반하고 있었다. 6월항쟁은 그간 억눌려왔던 민중들의 정치적 요구를 폭발시켰을 뿐만 아니라, 사회운동 및 문예운동의 의 제도화와 조직화를 가속화했다.

다채로운 진보적 사회운동 단체들이 6월항쟁 직후에 성립되었다. 1987년에는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7월 21일),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8월 19일), ‘자살’을 확대 개편한 ‘민족문학작가회의’(이하 작가회의, 9월 17일)가 창립되었고, 1988년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5월 28일),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6월 7일),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9월 2일), ‘전국농민단체협의회’(10월 30일) 등과 함께 ‘민예총’(11월 23일) 등이 창립되었다.

이는 6월항쟁을 기점으로 한국사회의 변혁적 욕망이 매우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그간 단일한 조직 중심으로 전개되거나 선택적으로 연대했던 문예운동 진영이 이 시기에 연합체의 형식으로 결집한 데에는 그러한 시대적 조건에 힘입은 바 크다.

장르 간 연합체의 형식으로 민예총이 출범하였지만, 민예총 형성의 주축은 작가회의와 민미협이었고, 여기에 과거 민문협에서 활동했던 젊은 연행예술가들이 문예운동의 노선차를 둘러싼 격렬한 내부 논쟁을 거친 후에 결합했다. 민예총은 “민족예술을 지향하는 예술인들의 상호연대 및 공동실천을 통하여 민중의 삶에 기초한 민족문화예술을 건설함으로써 조국의 자주, 민주, 통일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창립목적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창립목적에서도 알 수 있듯, 민예총의 창립이 분립해 있는 예술단체의 단일적 협의체의 성격을 띠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6월항쟁 이후 계급적으로 분화하고 있는 문예운동 모두를 포괄한 것은 아니었다. 사회운

동 영역에서의 NL-PD의 정파 분립과 비슷하게 문예운동 진영에도, 상대적으로 노동계급 당파성을 강조하는 예술인 및 그룹들이 있었지만, 범 PD 계열에 속하는 소장파 중심의 문예운동 그룹의 구성원들은 민예총에 참여하지 않았다. 창립 이후 조직론의 관점에서 민예총의 전개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편 참조).

① 창립 이후부터 1993년의 사단법인으로의 전환 직전까지의 시기는 민예총이 노태우 정부의 신공안정국에 대항하여 통일운동을 촉진하는 것과 동시에 민예총 내부의 문예운동의 조직역량을 축적·확대하던 시기였다. 그러나 이 시기의 민예총은 1980년대 문예운동의 연장선상에서 군부정권에 대한 대항적 문예운동을 벌여나가는 데 집중했고, 특히 당시의 통일운동의 고양에 따른 운동노선 탓에 정권과의 심각한 불화관계를 지속하면서 문예운동의 명확한 전선을 형성하고자 했다.

가령 1989년에는 민예총의 대변인이었던 확석영은 비밀리에 유럽을 거쳐 방북하여 김일성 주석과 면담했다. 그는 이후에 국내에서 북한방문기를 출판하기도 했는데, 이 출판에 관여된 문인과 출판인들이 체포·구속되는 일도 발생했다. 작가회의는 북한의 '조선작가동맹'에 남북작가회담을 제안했으나, 정부의 방북불허에 고을을 포함한 일군의 문인들이 임진각으로 향하다 체포·구속되는 일도 벌어진다. 1989년은 남북통일학생축전에 당시 전대협 대표로 임수경이 방북하고 이후 문규현 신부가 판문점을 통해 임수경과 함께 남한으로 도보로 입국하는 등의 사건과 함께, 국회의원이었던 서경원 의원의 방북사건이 안기부에 의해 조직사건으로 비화되는 등 통일운동의 고양에 따른 정권의 신공안정국이 형성되어 많은 예술가들이 연행·구속된 해이기도 하다.

민예총은 이러한 정부의 공안탄압에 숨 가쁘게 대응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1991년 5월투쟁에 전면적으로 개입하는 등 당대의 국면에서 문예운동의 정치적 성격을 뚜렷이 드러냈지만, 동시에 조직 자체의 역량강화

〈표 1〉 1989년 한 해 동안 연행·구속된 예술인

일자	이름	연행·구속사유
1989. 2. 17	고규태	북한원전출판
1989. 3. 27	강태형	북한원전출판
1989. 3. 27	고은, 신경림, 백낙청, 현기영, 김진경 외 21명	남북작가회담
1989. 3. 1	김규동, 김용태	범민족대회 대북문화교류 제의
1989. 4. 11	김용태	황석영 방북관련
1989. 4. 13	문익환	북한방문
1989. 5. 26	김사인, 임규찬	노동해방문학
1989. 5. 30	유인택, 홍기선	영화 〈오! 꿈의 나라〉 상영관련
1989. 6. 26	도종환	전교조 관련
1989. 7. 3	윤재길	서경원 의원 방북 관련
1989. 7. 1	이기형	시집 『지리산』 출판
1989. 7. 6	이승철	북한원전출판
1989. 7. 31	홍성담, 차일환, 정하수, 백은일, 홍희담	민족해방운동사 걸개그림 슬라이드를 평양축전에 보낸 혐의
1989. 9. 3	정지영, 정희철	외국영화 직배 반대하며 극장에 뱀을 투입한 사건
1989. 8. 17	신학철	작품 '모내기'의 이적성 관련
1989. 11. 2	이종률	노동운동사 문건소지
1989. 11. 23	이시영, 김이구	황석영 '북한방문기' 출간관련

* 참조: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편(1988, 127)

및 전망설정에도 총력을 기울였다. 『민족예술』의 발간과 〈민족미학 여름학교〉, 민족예술상 제정, 문예아카데미(1992)의 개설 등을 통해서 민족예술과 민족미학의 담론화 및 대중화에 힘썼다. 특히 문예아카데미는 당시 대중들의 점증하는 문예운동 영역에서의 진보적 비평 및 이론에 대한 열망을 비제도적 방식으로 응집시키자는 대안적 문화예술 아카데미 운동으로 대중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으며, 이후 대학제도 외부의 대안적 문화예술 교

육기관의 대표적 기관으로 자리 잡게 된다.

동시에 이 시기의 민예총은 노태우 정부의 문화정책에 대한 비판적 심포지엄을 개최해 실질적인 문화민주주의의 실현과 문화관련 악법 개폐투쟁, 남북한 문화교류에 관한 법적 보장 등의 문화개혁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문예행정 및 제도에 대한 정책적 개입을 강화해 나갔다.

② 1993년은 민예총이 사단법인 체제로 전환된 해였다. 이 시기는 국내적으로는 1991년 5월 투쟁이 외국어대에서의 당시 정일식 국무총리 내정자에 대한 계란투척사태로 희비극적 봉합되는 한편, 분신을 불사한 학생들의 반정부 투쟁이 김지하 시인과 서강대 박홍 총장 등의 ‘죽음의 굿판을 때려치우라’는 『조선일보』 칼럼과 ‘운동사회 내의 대규모 간첩 암약설’과 같은 음모론을 근거로 거세진 공안탄압 속에서 학생운동과 사회운동이 폐쇄되던 시점이었다. 세계사적으로는 소비에트 및 동구권의 몰락이라는 상황 변화가 있었는데, 이는 문예운동 영역에서도 종래의 반영론적·변혁적 이론이 포스트모더니즘 담론의 변성과 부딪치면서 이론적 전망이 혼돈을 빚던 시점이기도 했다.

특히 1992년의 대선 결과 김영삼 정부가 성립되었는데, 어쨌든 ‘문민정부’의 성립은 민예총을 포함한 문예운동 세력이 이전과 같은 정권에 대한 전면적 민주화 요구를 더 이상 어렵게 하였다. 이 시기의 민예총은 사안에 따라 정권에 저항하기도 하고 제휴하기도 하는 등 운동노선의 복잡화 국면에 처하게 되었다. 동시에 정권으로부터 제창된 세계화와 국제화의 바람과 함께, 서태지의 등장 이후 한국 대중문화의 급격한 성장과 문화적 다원주의에 입각한 소비대중의 형성은 민족예술운동의 조직적 대응을 어렵게 했다. 이 시기에 민예총은 사단법인화를 통해 이렇게 변화된 현실에 대응하고자 했다.

민예총이 사단법인화된다는 것은 이중의 의미가 있었다. 먼저 내부적 논리로는 사단법인화를 통해서 민예총이 더 이상 재야의 비주류 예술가들

의 단체가 아니라, 명백한 주류적 예술단체임을 자임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상황적 논리도 있었다. 새롭게 등장한 김영삼 정부는 3당 합당을 통해 형성된 민자당 세력이기는 하지만, 전두환·노태우 정부와는 다른 민주화의 정통성을 갖고 있는 문민정부이기도 했다. 따라서 사단법인화를 통해서 문민정부에 대해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정책적으로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한다는 실용주의적 전략이 사단법인화를 재촉했다. 그러나 문예운동의 전망 및 이론적 심화가 뒤따르지 않았기에, 민예총의 조직화와는 별도로 문예운동의 이론적 침체는 장기 지속될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③ 사단법인화를 완료한 직후부터 민예총은 중앙의 민예총 조직의 전국적 확산을 꾀하였다. 이것은 지역 문예운동 활동가들의 조직화된 결집에 그 일차적 원인이 있지만, 민예총 중앙의 조직강화 논리 역시 지역민예총 건설을 확산시켰다. 지역조직으로서는 1993년 전남민예총의 첫 창립을 시작으로 이후 동시다발적으로 대구·제주·여수·제천·청주·인천·광주 등지에 지역 민예총이 창립되어 예총 중심의 보수적 예술가 중심의 지역문화가 이 시기부터 민예총과의 경합적 상황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도 과거 군부독재 시기와 같은 전면적인 갈등은 아니지만 정권과의 불화는 지속되었다. 특히 1997년의 노동법과 안기부 법 날치기 정국이 그러한 예에 해당된다. 그런 가운데서도 민예총은 지역과 그동안 느슨한 협의체 성격을 띠고 있었던 장르 조직의 실질적 확대와 연대들을 갖추고자 하였다. 동시에 그간 유명무실하였던 문화정책연구소를 내실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문민정부의 출범을 기점으로 한국사회에 이른바 형식적 민주주의가 그 외형적 틀을 갖추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전 독재시기의 반제도적 또는 비제도적 문예운동의 방향이 정책적 개입의 양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민예총의 활동을 전환시켰던 것이다.

④ 1998년에는 ‘국민의 정부’를 캐치프레이즈로 제시한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였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출범은 민주화세력에게는 진정한 의미의 '민주정부'가 수립된 것을 의미했지만, '민예총'을 포함한 진보적 문예운동과 사회운동 세력에게는 곤혹스런 딜레마를 야기시킨 사태이기도 했다. 우선 거론할 수 있는 것은 이 민주정부 시기를 거치면서, 문예운동에서의 전면적 저항이나 대항이데올로기가 힘을 잃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어떤 차원에서 보자면,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성립시킨 문화판에서의 동반자 또는 지지 세력이 민예총이기 때문에, 이들 정권의 성공적인 국정운영에 기존의 재야 운동세력 역시 무거운 책임이 있다는 정권친화적인 태도와 무뎠던 비판의 칼날을 피하기는 어려웠다.

반면, IMF로 상징되는 '국가부도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김대중 정부가 조성한 이른바 신자유주의 드라이브는 한국 사회를 급진적으로 변혁시켰는데,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그것은 일종의 뒤집혀진 '토대결정론'이었다. 성장주의와 물질주의, 노동유연성과 구조조정, 능력주의와 자유주의가 이 시기에 심각할 정도로 팽배했으며, 한국 사회의 양극화는 매우 빠른 속도로 심화되었다. 또 이 시기를 거치면서 기존의 문예운동을 포함한 사회운동 또는 민중운동의 해체모니가 서구의 신사회운동을 모델로 한 시민운동 세력으로 이전되었다. 시민운동은 기본적으로 부르주아 민주주의에 기반한 제3섹터를 강화하자는 운동 목표로 연결되고, 이것은 정치행위에서의 합리적 조정과 선택적 개입을 강조하는 시민적 참여민주주의를 의미한다.

이러한 운동방식에서 선용되는 것은 가령 노동정책에서의 노·사·정 위원회의 구성과 이에 따른 노동정책의 조율을 포함한 거버넌스 체제의 확대로 요약될 수 있을 텐데, 이는 역설적으로 재야 및 운동세력의 '체제내화'를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러한 상황은 민예총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가령 민예총이 창립 직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한 문화영역에서의 남북교류는 정권의 지지 아래 제도적으로 매우 활성화되고 내실을 갖추어가지만, 이라크 파병 문제나 한미 FTA 등과 같은 신자유주의적 의제와 충돌했을 경우, 민예총이 이전과 같은 전면적인 반정부투쟁에 나서는 일

은 점점 드물어졌다. 게다가 이 두 정부의 집권 기간 동안 과거 민예총을 기반으로 활동했던 많은 인사들이 공공기관장이나 각종 위원회에 수혈됨에 따라, 정권 내부에서의 정책적 기획 및 혁신역량은 확대되었지만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재야 문예운동 단체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기는 점점 어려워졌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10년의 시간 동안 민예총의 외형적 조직은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부속기관이었던 문화정책연구소는 사단법인으로 전환되었으며, 기관지인 <민족예술>은 월간지로 발행되다가 인터넷 기반 커뮤니티 환경의 변화에 따라 문화예술 종합뉴스포인 <컬쳐뉴스>로 개편되었다. 민예총의 정책기능 역시 강화되어 문화부의 <창의한국>이나 <새예술정책>의 기획과 실행과정에 민예총 출신인사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그러나 이러한 민예총의 제도화·주류화 과정은 역설적으로 진보적 문예운동 단체로서의 ‘운동성’과 ‘현장성’을 현저하게 약화시켰다. 이 시기 동안 민예총은 장르조직과 지역조직의 외형이 확대되었고, 일종의 문화적 거버넌스에 해당하는 정부의 문화정책에 활발하게 개입하였으며, 민예총의 지도급 인사들이 문화부문 공공기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렇지만 문화권력이라는 우파 예술인들의 조직적인 비판은 물론 현장 예술현장 및 예술가들과의 심리적 거리는 점점 멀어져갔다.

무엇보다도 ‘민족예술’이라는 민예총 창립시의 문제설정이 변화된 시대환경 안에서 새로운 미학적 담론으로 혁신되는 법고창신(法古創新)의 이론적 모색이 무뎠다.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바람을 타고, 근대적 네이션(nation) 개념에 기반하고 있는 민족주의 이념은 그것이 저항적이건 보수적이건 막론하고 대중들과의 현실적인 영향력을 상실해갔다. 1980년대의 진보적 문예운동의 중요한 이론적 상징을 제공했던 민족문화론은 그 현실적·상징적 영향력을 상실해갔으며, 이것은 문학 이외의 여타의 장르예술에도 동일한 상황을 낳았다. 더구나 1990년대 이후 한국문화는 ‘민중성’ 대신에 ‘대중성’이라는 주체개념을 선호했으며, 영화와 미술을 포함한 시각예술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문화적 실험들이 만개했다. 동시에 생

산자 중심의 엘리트 예술운동을 대체한 문화적 공공성과 민주주의에 입각한 문화시민 개념이 등장하고, 대중들의 문화적 실천행위와 대중문화에서의 저항성을 읽어내려는 문화비평·문화연구·문화운동이 헤게모니를 장악하게 됨으로써, 민예총을 기반으로 한 장르예술가 및 운동의 연대의 구심력은 심각하게 약화되었다.

4. 문예운동의 감정구조: ‘적대-연대’에서 ‘협력-저항’으로

민예총이 창립된 것은 1988년이지만 조직의 형성과 전개과정에 따른 의미론적 단층은 사단법인화의 시점인 1993년을 분기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시간적으로 보면 민예총이 창립된 지 5년여가 되는 시점인데, 이 시점을 기점으로 전후의 문예운동을 둘러싼 감정구조가 크게 변화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렇게 보면 민예총의 실질적인 창립 및 조직내부의 변화과정과 무관하게, 민예총의 형성기는 1980년 광주항쟁 직후부터 1993년까지 제1기에 해당하고(형성기), 대략 1994년부터 2009년까지가 제2기에 해당한다(발전 및 쇠락기). 현재 시점인 2010년은 민예총이 조직적으로는 실질적으로 와해되었다가 재건을 기획하는 단계로 제3기의 시작으로 볼 수 있다(혁신기).

이 각각의 시기는 해당시기의 역사적 성격상 민예총을 중심으로 한 문예운동의 감정구조에 있어서도 상이한 양상을 보여준다. 그것을 도표화하면 <표 2>와 같다.

① 민예총 제1기는 광주항쟁의 진실규명과 군부독재 타도라는 명료한 문예운동의 목표로 특징된다. 이 시기 문예운동의 감정구조는 정권에 대한 명료한 적대의식을 기반으로 하여, 그간 각각의 장르조직으로 독립적 활동

〈표 2〉 민예총을 통해본 시기별 진보적 문예운동의 감정구조

구분	형성기(제1기) (1980~1993)	발전 및 쇠락기(제2기) (1994~2009)	혁신기(제3기) (2010~현재)
감정구조	적대-연대	협력-저항	성찰-혁신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부독재 타도→민주정부 건설의 명료한 운동목표 • 재야·대항적 문예운동의 정체성 강화 및 조직화 • NL-PD의 연합적 공동전선 • 민예총 창립(198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정부 강화→선택적 협력과 저항 • 사단법인화를 통한 제도화·주류화·조직화 모색 • 거버넌스를 통한 문화정책적 개입 • NL 주류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풀뿌리 문예운동의 조직역량 강화 • 민주정부 10년간의 거버넌스적 실천에 대한 성찰과 반성 • 진보적 문예이념의 재구성 및 혁신적 운동방향 모색
이념지향	민중주의/민족주의	민족주의/시민주의	민족주의/반신자유주의

을 진행해왔던 예술가들과 활동가들이 대항적 문예운동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이를 민예총이라는 연합체로 조직화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시기 문예운동의 특징은 문예이론과 운동상의 민중주의와 민족주의 노선의 상이한 이념지향이 반독재 민주화 투쟁과정 속에서 ‘합리적 연합전선’을 창출하고자 노력했던 ‘연대의 상상력’이 매우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1980년대의 문학예술계에서 1970년대와 달리 단연 뚜렷하게 등장한 주체 개념은 ‘민중’이었다. 민중이라는 주체 개념은 그것이 환기시키는 정서적 강렬도에도 불구하고, 이론적으로는 개념적 정의가 어려운 개념이었다. 1970년대의 유력한 주체개념이었던 ‘민족’ 개념이 근대국민국가의 성립과 민족의식의 창출이라는 역사적으로 뚜렷한 주체형성과정을 제시하고, 가령 이후에 급진화된 형태로 제기되는 ‘계급’ 개념이 가령 1970년대 돌격적 근대화에 따른 노동계급의 형성이라는 현실적·과학적 주체이념을 가능케 한 것에 비하면, 민중 주체란 노동자·농민·도시빈민·학생과 진보적 인텔리 모두를 포괄한 다소 모호한 개념이었다(박현채 1985, 76).

그래서 1980년대의 문예이론에서 ‘민중’이 언급될 때면, 흔히 ‘소외계층’의 의미를 강렬하게 내포하고 있는 기층민중이란 표현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주체개념의 불명료성에도 불구하고, 광주항쟁 이후 한국사회

는 지식인과 작가들이 선도적인 투쟁과 운동을 전개해왔던 1970년대에 비하면 기층 민중들의 운동역량이 비약적으로 강화되고 있던 시점이었던 것이 분명하다.

실제로 당대의 문학계에서 벌어졌던 ‘장르확산 논쟁’은 이러한 민중역량의 강화를 반영한 민중문학론의 이론적 진전을 가능케 한다. 이전까지의 진보적 문학운동이 지식인 작가들의 예외적 명작, 이를테면 황석영의 『객지』나 조세희의 『난장이가 쓰아올린 작은 공』, 신경림의 『농무』 등의 작품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면, 1980년대에 이르러 민중들 자신이 스스로가 처해 있는 상황적 곤란을 직접적으로 고백하고 사회모순을 고발하는 다수의 작품들이 발표되게 된다. 수기 르포르주에 해당하는 유동우의 『어느 돌맹이의 외침』을 시발로 하여, 석정남의 『공장의 불빛』, 장남수의 『빼앗긴 일터』는 물론이고 노동자 시인인 박노해의 『노동의 새벽』과 같은 빼어난 시집도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이전의 지식인 작가들이 공감적으로 견지하고 있는 ‘민중지향성’을 뛰어넘어 민중들 자신의 ‘민중성’의 발현을 이론화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지식인들에게 심어주며, 기왕의 제도적이고 엘리트적인 순수문학 개념을 해체하는 것은 물론 진보적인 지식인 문학의 한계 역시도 급진적으로 재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을 낳게 한다. 그래서 기왕의 진보적 문학 활동을 넘어선 진보적 문학운동으로의 전환을 촉진해야 한다는 소장 문인들의 담론이 동시다발적으로 제출된다.

당대의 사회과학계에서 전개되었던 사회구성체론의 영향이겠지만, 당연히 그렇다면 오늘의 한국적 상황의 주된 모순을 어디에서 파악해야 할 것인가를 둘러싼 논쟁도 확대된다. 간명히 말하면 분단체제로 상징되는 ‘민족모순’이나 아니면 산업화의 진전에 따른 ‘계급모순’이 핵심이냐를 둘러싼 NL-PD 논쟁의 경합이 문학예술계에서도 전개된 것이다. 이러한 한국사회구조에 대한 논쟁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1987년 이전까지의 문예운동은 일종의 ‘합리적 연합전선’을 구축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관점을

공유했다.

대략 1987년의 6월 직후까지 한국의 문예운동은 당대의 구조적인 모순을 심화하는 공통의 적대를 상징하고 있었다. 그것은 다 아는 대로 광주항쟁을 무력으로 진압한 후 집권한 신군부 세력이었다. 이들의 파시즘적 정치행태, 이로 인한 민중적 삶의 피폐화, 자본주의 모순구조의 심화, 민주주의의 숨 막히는 상황은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자유주의를 막론하고 공동의 연합전선을 구축하게 만들었고, 이것은 이후에 분화를 감행하게 되는 민족문화와 민중문화, 자유주의 문화와 진보적인 문화 사이의 공통의 적대를 지양하기 위한 연합전선을 가능케 하였다. 그래서 이 시기의 문예운동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이게 된다(이명월 2008).

㉠ 이 시기의 진보적 문예운동은 분단모순에 기반한 민족문화(예술)론에서의 민중개념을 정교화하면서, 민중주체 문학론 또는 예술론으로의 이론적 전환을 가능케 한 민중의식의 개념화에 깊은 관심을 기울였다.

㉡ 이러한 과정은 한편에서는 민족문화론에서의 민중문화(예술)론으로의 분화를 추구할 동시에 민중 단위 안에서 노동자 계급의 주도성을 확인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는데, 이를 통해 당대 한국 사회의 심화된 계급모순에 대한 첨예한 인식의 추구가 가능해졌다.

㉢ 이러한 과정 속에서 문학의 생산과 소비를 둘러싼 기왕의 부르주아적 문예제도 전체가 근본적으로 상대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술생산 주체로서의 민중적 장르확산 및 예술의 정치성을 둘러싼 논의가 심화되었다.

㉣ 이러한 현상은 문예학적 차원에서 리얼리즘론의 심화와 확대에도 커다란 기여를 하는 동시에 이후의 이론적 분화와 급진화를 가속화했다.

㉤ 1980년대의 예술이론은 예술을 제도로부터 해방시키는 것과 동시에 그것을 정치적으로 전화시키는 운동론적 시각을 일반화하여, 문학과 삶의 일원적 실천을 가능케 하였다.

그리하여 6월항쟁을 거치면서, 문예운동은 좀 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정치적이고 미학적인 투쟁을 촉진하기 위한 연합체로서의 민예총을 건설하게 만든다. 민예총이 건설된 후에도 제1기의 감정구조를 지배하는 단일적대로서의 정권에 대한 대항적 운동방식이나 문예운동 진영내부의 연대의 상상력은 심각하게 균열되지 않았다. 물론 민예총이 건설되면서 이른바 범 PD진영의 예술가와 활동가들은 ‘반자본주의’와 ‘노동계급당파성’에 입각한 급진화된 운동으로 전화해 나갔지만, 1991년 5월투쟁의 갑작스런 해소와 소비에트 및 동구권의 몰락이라는 세계사적 변화는 운동기반을 급속하게 잠식해나가기 시작했다.

② 민예총 제2기의 감정구조는 정권에 대한 사안별 선택적 ‘저항과 협력’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것은 제1기의 감정구조인 ‘적대와 연대’와는 상이한 지형으로 민예총의 문예운동의 방향이 바뀌었음을 의미한다. ‘적대’의 관점에서는 정권에 대한 전면적인 저항과 비협력의 관점이, 연대의 관점에서는 예술가 및 민중과의 연합적 운동의 구상이 중요한데, 반해 제2기의 협력과 저항은 정권과의 문예운동 조직의 ‘거리조정’이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것이다. 간명하게 말하면, 이러한 변화는 민예총의 조직논리가 ‘대항 운동적’ 성격에서 ‘제도관리적’ 성격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물론 이러한 변화를 추동한 것은 1993년 민예총의 사단법인화다. 민예총이 사단법인화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재야의 문예운동단체가 아니라, 제도권 내부의 거대 예술단체로 민예총이 스스로를 정립하고자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예총에 지도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축회원들이 소속되어 있는 작가회의도 이 시기에 사단법인으로 전환되는데, 이것은 당시의 진보적 예술운동 조직이 변화된 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적극적 기획을 집단적으로 모색했음을 보여준다.

물론 이러한 변화는 구소련 및 동구권의 해체에 따른 세계사적 이념지형의 변화, 문민정부인 김영삼 정부의 등장에 따른 군사독재 체제의 형식적 해소, 민족미학을 포함한 기왕의 진보적 문예이론의 현실적 영향력 약

화와 청산주의적 경향의 점진적 확대라고 하는 여러 요인들이 개입해 있었다. 그렇다고는 해도 민예총의 사단법인화는 이를 통해서 형식적 민주화라는 정치적 환경의 변화에 따른 열린 제도적 공간에서의 변화의 기틀을 다진다는 상황논리에 따른 정당한 기획에도 불구하고, 운동조직으로서의 운동성이 약화된다는 부정적 영향을 피하기는 어려웠다(강영석 2005, 67). 이러한 현상은 특히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민관협치의 내용을 담고 있는 거버넌스 체제에 민예총이 깊은 수준에서 연루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그 결과 기왕의 조직역량 역시 내적으로 분해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러나 제2기 동안 민예총이 최량의 역량을 발휘한 것은 조직의 체계화와 지역적인 확산이었다. 민예총의 사단법인화를 전후한 시기에, 민예총은 한편에서는 그간 실질적인 활동을 하지 못했던 장르위원회를 해소하고 장르연합체의 성격을 강화했다. 민예총 창립 당시에 구성된 장르위원회는 각각의 장르예술단체의 연합체적 성격이 아닌 개인회원 중심의 체제였다. 개별적으로 가입한 각 장르분과의 회원들이 위원회 형식으로 문학·미술·연행 등의 분과에 소속되어 활동했으나, 이러한 구성이 실질적인 예술가단체의 내적 결합으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사단법인화를 전후하여 민예총은 명실상부한 예술가단체의 연합적 성격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종래의 장르위원회 대신에 장르연합체로서의 조직 개편을 강화한다.

동시에 민예총은 지역민예총의 설립을 촉진시켜나간다. 민예총은 설립 초기부터 지역 문예운동의 조직화 및 역량강화를 의식하고 있었지만, 실질적인 지역민예총이 활성화되는 1995년 김영삼 정부의 지방자치제 실시가 초래한 지역의 문화정책 개입의 정치적 공간 확보가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따라 정부는 지역문화의 활성화 및 지역 문화정책의 정책파트너로서 대표성이 있는 예술가단체와의 협력이 불가피해졌는데, 민예총의 입장에서 보자면 지역에서의 문화정책의 실현을 예총과 같은 종래의 보수단체가 독점하는 것을 막을 필요성이 있었다. 그러니까 지역민

예총의 설립은 민예총의 조직논리의 차원에서는 풀뿌리 기층조직의 내실화와 조직화라는 목표와 함께, 지역의 문화정책에의 정치적 개입이라는 이중의 목표를 실현하는 토대로서 기능할 것이라는 고려가 결과적으로는 작동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문화정책의 문제가 나왔는데 실제로 이 시기를 기점으로 해서 민예총은 기왕의 대항 운동적 차원에서 문화정책의 기획·입안·실행·비판 등 진보적 문화정책역량의 강화에 더욱 힘을 기울인다. 이러한 정책기능의 강화는 정치적 민주화와 더불어 진보적 성향의 사회운동단체가 정책전반에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커졌다는 점에 의거한다. 민주화 이전 권위주의 정부가 진보적 사회운동에 대한 정치적 배제와 탄압의 방식을 취했던 데 반해,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는 국정운영에 진보적 인사들의 참여의 공간을 확대시켰다. 또 지방자치제와 지방분권화의 경향은 서울 및 수도권에 기반한 메이저 운동단체들뿐만 아니라 지역기반의 풀뿌리 사회운동단체들의 정책적 참여공간을 확장시켰는데, 이러한 상황의 변화가 민예총의 정책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낳게 된 것이다(강영석 2005, 72). 특히 김대중 정부의 출범 이후 민예총의 정책적 개입공간이 확장되었고 정부의 문화산업 지원정책으로 민예총에 대한 예산지원이 확대되었다. 그리하여 노무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민예총은 확대된 물질 자본과 정책적 개입공간을 토대로 다채로운 문화행사 및 활동을 하게 되었다.

〈표 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민예총 제2기에 역점을 기울인 분야는 일상적인 전국적 문화행사와 문화정책과 관련된 간담회 및 토론회 등에 한정되어 있다. 특히 김영삼 정부 시기와 비교해 보면, 김대중 정부의 집권 이후 문화행사 횟수는 가히 폭발적으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김대중 정부가 집권했던 바로 이 시기는 민중적 차원에서 보자면, 한국 사회가 신자유주의의 광풍 속으로 휩쓸려 들어가던 때에 해당한다. 전통적인 사회운동과 민중운동 진영은 ‘반신자유주의’를 기치로 정권과의 갈등을 더욱 고조시켜 가던 때가 바로 이때인데, 이 시기에 민예총은 일

〈표 3〉 민예총 연도별 활동분류

구분	성명서/ 기자 회견	간담회/ 토론회/ 공청회	공연/ 문화 행사/ 교육 사업	캠페인	결의 대회/ 농성	자료집 발간	시상식	내부 활동 (수련회, 체육대 회 등)	비고
1989	8	3	8	·	2	1	·	1	상직적 구심체
1990	9	5	9	·	1	·	·	5	장르단체의 협의체 적 전환
1991	15	5	7	1	3	1	1	1	장르조직의 확대를 위한 노력
1992	2	3	9	·	·	·	1	4	민족예술대중화와 문화개혁방향모색
1993	1	6	10	·	·	1	1	2	사단법인화
1994	1	9	44	2	·	·	1	1	지역민예총건설
1995	1	4	27	·	·	·	1	·	통일원년, 역사바로 세우기
1996	·	9	44	2	·	·	1	1	장르중심에서 지역 중심으로
1997	2	5	36	·	2	·	2	2	지역과 장르의 유기 적 결합 노동부법, 안기부법 날치기 통과
1998	·	3	16	·	·	·	·	1	21세기 문화민주주 의 대안을 세우는 사업에 치중
1999	5	10	241	1	6	22	4	12	전국차원의 정부 지원증가 지역민예총 확산
2000	11	15	281	2	2	11	1	7	지역민예총 조직 강화 지역차원의 문화정 책연구소 신설 및 안정화
2001	1	21	385	·	6	10	·	4	지역문화 활성화, 정책개입활동 강화
2002	1	26	196	3	5	10	·	3	장르, 지역, 창작역 량 강화
2003	3	33	289	1	3	8	1	9	문화예술사업 치중, 전국적 문예단체로 서의 대표성을 지님

* 참조: 강영석(2005, 76)

상적인 문화 활동 및 정부의 문화정책에 대한 개입과 협력을 오히려 강화하고 있었던 것이다.

특히 노무현 정부의 성립 이후에는 정권에의 직접적인 참여와 정책의 거버넌스적 실행에 있어 더욱 밀도 높은 협력의 양상을 보여준다. 진보적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문화부의 주요공공기관의 장으로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과거 민예총의 장르위원회의 대표하던 인사들이 문화관광부 산하 공공 기반시설의 단체장으로 대거 참여하기도 했다. 바꿔 말하면 제2기에 들어 민예총은 전통적인 예술운동의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조직의 운영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예술의 공공성 지원을 전제로 하는 문화정책의 선택적 개입을 선호했고, 이 과정에서 참여정부에 들어와서는 스스로 국가문화정책의 대리자로 자처하는 개인적, 조직적 이행을 시도했다는 비판적 평가에 직면하게 되었다(이동연 2008, 81).

민예총의 제2기가 전개되는 동안 정권에 대한 ‘선택적 저항과 협력’이라는 조직의 감정구조는 거버넌스라는 참여민주주의의 논리에 포섭되어 예술운동 조직으로서의 민예총의 정체성을 내부로부터 심각하게 훼손했다. 뿐만 아니라, 민주정부 기간에 이루어진 조직의 외형적 확대와 주류적 제도화라는 욕망을 실현해가고자 했지만, 이명박 정부의 성립 이후 역설적으로 조직이 실질적으로 와해되는 파국에 직면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것은 민예총을 지탱하고 있었던 민족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적 재구성이 없는 상황에서, 부르주아 시민주의에 입각한 정치참여 형태인 ‘거버넌스’ 전략의 실패를 의미한다. 동시에 이 시기의 민예총의 주류화는 1980년대 민중주의와의 연합을 통해 생성되었던 민중적 현실과의 광범위한 유리를 낳은 데서 더 나아가, 1997년 이후 한국사회를 위로부터 급진적으로 변형해나갔던 신자유주의 체제에 대한 전략적 대응을 방기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과 함께 더욱 큰 문제점은 진보적 예술가단체의 연합체임을 자임하고 있는 민예총이 종래의 전통주의적·민족주의적 ‘민족미

학'을 현대화하거나 급진적으로 재구성하려는 비판적 기획을 풍부하게 선보이지 못한다는 것이다. 예술가단체는 그것이 단체이기는 하되, 일반적인 사회운동이나 정치운동과는 다른 예술운동 특유의 미학적 테제의 정교화와 체계화에 따라, 문화적 공론장 안에서의 헤게모니를 관철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 시기의 민예총은 제도적 권력을 확장·강화하는 것에 안주한 나머지, 결과적으로는 미학적 혁신이나 조직의 내실화라는 과제 모두에서 실패했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성립된 이후 진보적인 문예단체들은 대개 정권의 행정적·재정적 탄압에 직면하게 되었다. 민예총 역시 이러한 탄압에 직면하게 된 것은 분명한 일이지만, 외부로부터의 탄압에 따른 위기가 오기 이전부터 민예총은 내부적 정체성의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5. 민주화 이후 정치적 반동기의 문예운동

지금까지 우리는 민예총을 중심으로 1980년대 이후 한국의 진보적 문예운동의 형성과 전개과정을 간략하게 검토해 보았다. 지금까지의 검토과정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민예총의 결성을 촉진한 것은 광주항쟁을 폭력적으로 진압하면서 등장한 군부독재에 대한 예술운동 조직들의 조직적 저항과 그것을 가능케 한 '합리적 연합전선'의 구축이었다. 1970년대의 민주화 과정 속에서 형성된 민족주의적 저항의 문제의식과 1980년대에 급진화된 민중주의가 '반독재 민주화'의 과정 속에서 연합전선을 가능케 했고, 이것이 이후 민예총이라는 전국적인 장르예술연합체를 태동하게 만들었다.

둘째, 그러나 민예총의 형성과정 속에서 민중주의와 보다 급진화된 계

급주의 문제의식은 배제되었으며, 민족주의의 강화 속에서 시민주의가 수혈되었다. 이러한 이념지형은 정권에 대한 선택적 협력과 저항이라는 감정 구조를 산출해냈지만, 실제로 형식적 민주화의 진전 속에서 민예총은 거버넌스 체제로의 통합이라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지역과 장르의 조직 강화와 같은 조직 보존논리가 승하게 되면서, 오히려 문예운동조직으로서의 정체성은 약화하게 된 것이다.

셋째, 그렇다면 제3기에 해당하는 오늘의 상황에서 민예총이 조직의 재건과 혁신을 위해 고려해야 할 것은 변화된 현실에 부응하는 예술가 단체의 정체성과 미학적 이념의 재구성 문제로 귀착된다고 볼 수 있다. 현재의 민예총 재건위가 이 작업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지는 공식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필자의 생각을 간략하게 밝히는 것으로 이 글을 마무리해 보고자 한다.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문제는 오늘의 세계사적 및 한국적 현실의 규정력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민족예술의 체계화와 조국의 자주, 민주, 통일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설립된 민예총은 아마도 분단체제로 상징되는 민족모순을 규정력으로 간주하고 있을 확률이 높다.

그러나 이러한 모순에 대한 인식이 얼마간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더욱 중요하게는 오늘의 신자유주의 지구화가 파생하고 있는 세계체제 변형의 현실을 직시하고 또 이것을 이론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싶다.

우리가 지난 형식적 민주화 시기의 경험에서 확인한 것처럼, 심층 민주화는 단순히 정치적 차원에서의 대의민주주의의 정상적 가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인민의 직접적인 정치적 견해표시와 정치참여를 제약하고 있는 것이 현행의 대의민주주의로 상징되는 형식적 민주화의 실체라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의 집권 이후 벌어지고 있는 민주주의의 반동경향 역시 형식적으로는 대의제가 부여한 권력의 합법적·비합법적 지배의 책략이 가동한 명백한 사례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민주주의의 실질을 확대하기 위한 직접민주주의의 강화라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동시에 오늘의 대의제 체제를 사실상 부르주아적 관점에서 급진적으로 변형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운동전략이 사회운동 진영뿐만 아니라 문예운동 진영에서도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간의 민예총의 개입전략은 국가권력의 문화 부문에 인적·제도적으로 결합하여 권력의 속성을 변화시키려는 태도와 함께, 정책과 담론의 수준에서 그것을 제도화하는 데 집중했다. 이것은 문예운동의 테크노크라트적 혹은 관료제적 변질로 나타났으며, 그것이 우리 안의 내면화된 참여민주주의의 한 허상으로서의 거버넌스 체제라는, 대항운동 없는 체제협력 귀결되었던 것이다.

오늘의 문예운동이 실질적으로 혁신되기 위해서는 비제도적 운동과 실천의 전략을 보다 정교하게 구상할 필요가 있다. 문예운동의 비제도적 전략이란 단순히 우호적인 정권에의 참여를 거부하지는 단순한 주장의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정치권력 자체가 그 대항권력조차도 내면화된 협력의 메커니즘 속에서 ‘운동성’을 거세하는 속성을 인식하고, 민예총을 포함한 대표적 진보단체들 역시 조직의 권력화에의 유혹을 메타적으로 경계하면서, 1980년대와는 다른 형태이지만 보다 광범위한 대중들 혹은 민중들과의 문화정치적 연계를 확보하지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존의 문예운동이 보존하고 있는 예술가 중심의 운동이라는 관점은 불가피하게 유지한다고 할지라도, 1980년대의 소중한 유산인 문화운동론적 관점에서의 사회운동 진영 및 대중들과의 광범위한 연계를 다시금 기획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이영미 2009). 이를 위해서는 운동의 이념적 기반에 해당하는 종래의 민족주의를 급진적으로 변형하는 한편, 반신자유주의 연대의 기반이 되는 이념의 진보적 재구성이 필요하다. 가령 사회운동과 문화운동을 적극적으로 결합시켜 기왕의 민중주의를 넘어선 ‘어소세이션의 어소세이션’을 광범위하게 구성하는 전략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기존의 민예총이 집중하고 있던 정책기획 기능을 일종의 대안체제론 쪽으로 급진적으로 구부릴 것을 요구하는 주장이기

도 하다.

기왕의 전통주의적·변혁주의적 민족미학 역시 오늘의 현실 속에서 혁신하는 것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전면적으로 개조하려는 자세를 취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 문학예술계를 포함하여 오늘의 문화적 상황은 일국적 관점에서의 조망이나 체계화의 유혹 대신, 지역적이면서도 동시에 국제적인 시야의 도입을 강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중의 문화적 실천과 향수 행위 모두가 자본주의의 상업적 회로 안에 폐쇄되어 있다. 그렇다면 문예운동을 지탱하는 사회개입의 전략과 미학 모두 이러한 변화된 현실을 추수하지 않고, 대중들의 환유화된 욕망을 진보적이면서도 급진적인 집합감정으로 구조화할 수 있는 담론과 전략의 개발이 필수적인 것이다.

문예운동의 실패는 조직화의 실패이기보다는 담론투쟁에서의 실패를 의미하며, 이것은 현실을 독해하는 예리한 이론적 사유와 이에 기반한 광범위한 대중들의 조직화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다. 1980년대 민중문화론이 그 영향력을 넓히는 가운데 참신하게 논의되었던 예술생산의 주체 확산 문제와 그것의 수용지평에 대한 논의가 오늘의 시점에서, 새로운 이론과 담론의 모색을 통해 집합적 정념의 조직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어떤 차원에서 보자면 변혁의 시기에 등장했던 대중들의 운동참여는 그것이 정치적 각성에 기반하기도 했겠지만, 그 지속의 강렬성을 보장한 것은 일종의 감정혁명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문예운동의 최종적인 목표가 보수적 감정구조를 어떻게 급진적이고 진보적인 감정구조로 변혁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한 고민을 요구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키는 문제이다.

한 논자가 지적했듯, 대중들의 집합적 열정과 정치의식은 위로부터 구조화되는 동시에 스스로를 만들어나가는 것이라는 점에서(툼슨 2000), 이러한 문제의식은 문예운동판에 긴급하게 수혈되어야 할 문제가 아닐 수 없다. ~~.....~~

참고문헌

- (사)6월민주항쟁계승사업회, 2007. 『6월항쟁을 기록하다』 1-4권.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 강영석, 2005. “한국문화운동의 변화: 부문운동에서 시민문화운동으로.” 성공회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고 은 외, 1983. 『문학과 예술의 실천논리』. 실천문화사
- 김남일, 2007. “펜의 자유’를 넘어 민중문화운동의 주춧돌로.” 『6월항쟁을 기록하다』 제2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김도연, 1985. “장르확산을 위하여.” 김병걸·채광석 편. 『민중, 민족, 그리고 문학』. 지양사.
- 김병걸, 채광석 편, 1985. 『민중, 노동 그리고 문학』. 지양사.
- 김영철, 2007. “문화인의 연대, 항쟁의 지평을 넓히다.” 『6월항쟁을 기록하다』 제2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김진균, 1988. 『사회과학과 민족현실』. 한길사.
- 라원식, 2007. “민중의 현실을 빛의 현실로.” 『6월항쟁을 기록하다』 제2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레이먼드 윌리엄스, 성은애 역, 2007. 『기나긴 혁명』. 문학동네.
- 박태순, 2004. 『문예운동 30년사』 1-3권. 작가회의 출판부.
- 박현채, 1985. “민중과 문학.” 『민중, 민족, 그리고 문학』. 지양사.
- 서울영화집단 편, 1983. 『새로운 영화를 위하여』. 학민사.
- 유대기, 2007. “출판, 이념과 사상의 거처.” 『6월항쟁을 기록하다』 제2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이동연, 2008. “예술운동의 죽음과 생성.” 『문화과학』 제53호. 문화과학사.
- 이명원, 2008. “적대와 연대, 그리고 분화의 전화.” 『내일을 여는 작가』 겨울호.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 이영미, 2009. “문화운동의 정체성과 본질에 대한 질문.” 『기억과 전망』 제21

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재현 편, 1985. 『문학이란 무엇인가』, 청년사.

임진택, 1990. 『민중연희의 창조』, 창작과 비평사.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편, 1993. 『민족예술합본호 1988-1992』, 한울.

_____. 1998. 『민예총 10년사』.

현실과 발언 동인, 1985. 『현실과 발언: 1980년대의 새로운 미술을 위하여』, 열
화당.

E. P. 톰슨, 나종일 외 공역, 2000. 『영국노동계급의 형성』, 창작과비평사.

투고: 2010.8.31 심사: 2010.10.15 확정: 2010.10.29
